

01

성평등의 전환기,
#MeToo 운동의 과제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들어가며

“새로운 페미니즘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진지한 정치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계급-카스트 제도를 뒤집어 엮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두 번째 물결”(술라미스 파이어스톤, 1972,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2018년 대한민국 사회는 ‘미투(#MeToo)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를 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가 수십 년 간 배우, 영화사 직원, 모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뉴욕 타임즈 보도(2017년 10월 5일)가 촉발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 시간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밝힌 것이 분기점이 되었다. 당시 인터뷰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는 사건에 대해 뒤늦게 알린 이

유를 밝히면서,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 권력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고위직 검사마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이에 문제제기하는데 8여 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전반을 아래로부터 흔들었다. 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돌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인지” 몰라 “꼭꼭 삼키고 또 삼켜냈던” 경험들이 오랫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기억을 세상으로 끄집어내는데 기여한 것인가. 이후, 여성들의 피해 사실 폭로는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8년 가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스쿨미투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투 운동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포스트미투’를 어떻게 상상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출처: 중대신문

[그림 1] 중앙대 K교수 연구실 앞에 붙은 포스트잇



출처: 학생인권 대나무숲

[그림 2] 대구 F사립여자중학교 스쿨 미투 포스트잇

‘미투 운동’이 남긴 과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 것은 재능 있고 의욕적이던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문단과 업계의 주변부로 밀려나가거나 반강제적인 탈출을 감행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여성들은 실제로 죽었고 또, 사회적으로 천천히 죽어갔다. (양민영, 2018년 2월 12일)¹⁾

양민영(2018)의 “사회적 타살”이라는 개념은 여성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일상적이되 제도화된 행위다. 여성에 대한 일상의 불인정과 무시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분배 부정의의 문제로, 실존적 타살로 연결되는 구조적 부정의의 연속선을 암시한다.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은 보통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 관료제 위계 체제와 시장질서 속에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지니는 이런저런 생각과 반응에서 야기된 결과물 때

문에 일부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부정의”를 구조적 억압이라 정의한 바 있다. 억압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주요 제도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지배자나 독재자 일인 축출만으로 제거될 수는 없다(1990[2017], 107-108). 이후 영은 다른 책에서(2011[2013]) “정의를 위한 공유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 주장하면서(246), 구조적 억압의 과정과 결과-부정의-에 책임 있는 우리 모두는 법적 책임에선 자유로울지 모르나, 정치적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가 제시한 정치적 책임을 종합해 참고하면서,²⁾ 미투 운동(#MeToo)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려 한다.

첫째, 피해자의 요구와 목소리 내기의 중요성이다.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모두 절대적으로 옳다는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약자’로서 ‘순수한 피해자’를 상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온 몸에 각인된 아픔을 헤치며 다가올 갇은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이 계속 고백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

1) 양민영, 2018년 2월 12일 “최승자, 박서원, 최영미... 문단에서 타살당한 그 이름: [주장] 피해자는 잊히고, 가해자만 건재한 #문단-내-성폭력... ‘미투’를 응원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View/at_pg.aspx?CNTN_CD=A0002404357

2) 아이리스 영은 1)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는 것, 2) 피해자의 적극적 요구, 3) 제3자의 역할, 4) 국가나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책임의 과제를 고찰하고 있다.

니다.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겪는 특정 고통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발생한 구조적 부정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과정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힘을 가진 사람이 실제 과정을 바꾸어 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48). 개인의 고통을 드러내고, 타자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만으로 연대를 유지하고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긴 역부족이다. 피해의 경험에 중요한 이유는, 나를 무기력한 피해자로 고착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부정의한 제도를 바꾸고자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의 대열에 서게 하는 주체(재)구성 주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당사자들이 성폭력이란 개념도 없던 시절, 용감하게 나서서 전시성폭력의 개념을 세우고 전 세계의 인권 규약을 바꾸어 왔던 과정을 상상해 보자. 무지의 한국 사회를 깨우고 피해자성을 확장하게 해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일제의 침략성을 환기해 젊은 세대에게 평화로운 미래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 것도 당사자였다. 더군다나 김학순, 강덕경, 김복동, 길원옥 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던 우리 사회의 유령에서 말하는 피해자로, 다시 구조를 변혁하는 활동가로 변화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지난 세월, 축적된 피해자성을 들여다보되 피해자라는 폐쇄적 격자구조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유사한 경험을 폭로하고 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 과정에 다시 내가 상처 입는 도돌이표가 아니라, 나의 피해 경험이 우리사회 속에 어떻게 위치되어 왔는지 고민하면서 사회구조와 연결 지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 우리

는 비로소 주체로 재구성된다.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동일시하며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당위는 현실에서 상대와 나의 차이를 확인하는 좌절로 이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런 실패가 예정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오만한 태도였어요. <공동정범> 김일란 감독의 인터뷰 중)³)

김일란 감독이 적절히 지적했듯, 절대적 다름을 전제한 타인과의 연대가 불가능하듯, 피해(자) 간 동일성을 상정한 공감과 연대 또한 실패하기 마련이다. 동일성이 상정되면 작은 차이에도 좌절한다. 동일한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닌 다른 주체들이 연대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둘째, 우리는 의식적/무의식적 가해자성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구조적 부정의를(재)생산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2013)은 “권력을 소유한(특권계층의) 행위자는 구조가 현상 유지되는 데서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조가 변화하는 데서 이익을 얻는다”고 했다(247).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 체계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러한 구조로 인해 알게 모르게 혜택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쩌면 특정 사안에서는 제3자일 수 있으나 다른 사안에서는 동조자, 방관자, 직접적 가해자였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구조적 부정의를 재생산하는데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가담해 왔으리라. 우리 모두가 지닌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간 극심한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순이 지적한 바 미투 운동이 “사회적 변혁운동”으로

3) 김일란, 2018년 2월 14일, “용산참사 피해자들 엇갈린 기억으로 반목, 진상규명으로 치유,” 경향신문, http://m.khan.co.kr/ent_sp_view.html?artid=201802141907005#csidx3ad30b48adea67884c59371a2dee8b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행한 일부터 차분히 성찰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먼저 직시하고, 자신도 모르게 동참한 구조적 부정의의 (재)생산 회로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계적 권력 질서에서 결국 대다수의 남성들은 구조가 변화하는 데서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차별적 언어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차별, 추행, 희롱, 폭력 등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성’과 상관없이 다양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에 의해서 또는 ‘타자’들에 의하여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가 또는 ‘몰랐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추행, 희롱, 폭력, 차별 등에 대한 이해는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지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선 사회의 차별과 평등에 대한 인지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그러한 행위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예민화되고,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미투 운동”은 장기적으로는 근원적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을 마련하는 ‘사회적 변혁운동’으로 자리잡기 힘들다고 나는 본다. (강남순의 페이스북)⁴⁾

특히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권력과 이익을 둘러싼 투쟁에 참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영의 제안처럼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공적인 논쟁을 지속

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248). 이는 대안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인식론적 기반이 되며, 개인적 문제의식을 묶어, 차별적 구조 변혁을 위한 집단적 운동으로 성장시킬 동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미세한 차이의 결들을 생산해 낸 구조를 인지하고, 그 구조들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혜택을 입은 우리들의 정치적 책임을 환기할 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운동,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청원운동 등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체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변혁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면서 여전히 봉건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들, 2차 산업혁명과 근대발전국가 논리에서 파생된 1인 남성노동자 생계부양 모델에서 사로잡혀 있는 비합리적, 비이성적, 반인권적 남성들을 ‘인간화’하지 않으면 공멸하겠다는 자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남성 개조가 필요하다는 혁명적 정신의 발로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의 전면적 의식 개조를 요구하는 이 같은 현상은 ‘남성인간만들기 장기 프로젝트’로 봐야 하며, 생존과 공존을 위한 세상을 향한 열망이다.

4) 강남순, 2018년 2월 24일, <https://www.facebook.com/kangnamsoon/posts/2171539182875108>

“정부와 청소년관련 세 부처는 학생들의 SOS에 응답하라” 청와대 청원서 중 요구 내용

- 교육자의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모든 교육자의 성평등강의 의무 이수제
- 스쿨미투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교육관련 재취업 금지와 교원자격 영구박탈
- 교육부의 정기 전체 사립·공립학교 동시 성범죄 감사
- 경찰의 스쿨미투 공식수사

마지막으로 구조적 부정의를 시정할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구조적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다. 부정의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와 권한이 있다. 우선 헌법에 성평등 조항 신설과 10여 년째 미뤄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급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 차원의 차별금지법인 일반적 동등대우법을 이미 2006년에 제정했고, 이를 토대로 각 주는 유사한 내용의 주 차별금지법(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조례에 해당)을 제정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비동의 간음죄’ 신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 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성평등 내용 규정, 프랑스처럼 형법에 가중처벌 등 성희롱 규제, 성희롱 당사자 범위의 확대(특수 고용자—문화예술인, 비공식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보험설계사), 징벌적 손해배

상 청구소송제도 마련, 성희롱 사주에 대한 피해자의 작업 거부권, 노사교섭을 통한 구제 등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뿐 아니라 법과 현실 간, 제도와 인식 간 괴리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실제 2018년 6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은 백 개가 넘는다. 2016년 6월부터 발의된 관련 법안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 3월까지 약 140건에 달하며,⁵⁾ 서지현 검사 고발 이후 제출된 법안만 30개가 넘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한다.⁶⁾ 발의안 중에는 문제가 많은 것들도 있으니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화하여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문제는 지금 전국의 중고등학교 약 60여 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쿨미투 운동과 연결할 때 시급하지만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유치원부터 체계적으로 젠더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⁷⁾이 이루어져야 하고 초중고에서도 교과과정 내에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이 ‘똑같음’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데서 성취될 수 있음을 어린 시절부터 체현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이다. 현재 사범대학이나 교육학과에는 젠더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페미니스트 교수도 거의 부재하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5) 연합뉴스, 2018년 5월 9일, “미투관련 법안만 약 140건...국회는 잠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8/02000000000AKR20180508107200797.HTML?input=1195m>

6) 경향신문, 2018년 6월 12일, “‘미투 관련법’ 12건 중 10건은 국회에서 낫잡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21458001&code=940100

7) WHO(WHO Europe, 2010)의 정의에 따르면, 통합적 성교육이라고도 지칭되는 포괄적 성교육은 인간 성장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성 관련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은 “몸, 건강한 섹슈얼리티, 관계, 성폭력, 임신, HIV 및 성병 예방 등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섹슈얼리티,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포괄적 주제들에 대한 지식”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도우며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에서도 페미니즘 수업과 교수는 손꼽을 정도다. 대학의 교과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페미니즘 수업이 학제와 학과, 수업, 교양 필수 과목 등으로 개설되어 교수자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은 한 초중고 페미니즘, 인권 수업은 요원한 실정이다. 학습자는 있되 교수자는 부재한 현실에서 성급하게 제도 마련이 이루어질 때 파행적 교육은 불 보듯 뻔하며 심지어 역풍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성평등교육 및 정책 전담 부서 설치 등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문제의식이 공유된 상황에서 대학에서부터 성차별적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정부에게 전적인 결정권을 주어서도, 지나치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칙과 관행은 부정의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부정의를 생산하거나 영속화하려는 권력자나 과정”에 더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시도가 종종 “부분적으로 실패하거나 전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다(영, 2013: 250-251). 정부는 구조적 과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투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투쟁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정부에 공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18년 3월 15일,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 시민행동)의 발족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투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는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반대

시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시국 과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시민·노동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출범 취지를 밝히고,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목표와 방향을 천명한다.⁸⁾

-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한다.
-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출범 자체가 의미 있는 이유는, 우선 단시간 안에 337개의 시민단체와 161명의 각계인사의 참여를 통해 성차별·성폭력 근절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여성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시민사회계에

8) 출처: 시민 행동 보도 자료 <http://metooaction2018.tistory.com/36>

서도 폭넓은 연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의 말처럼, 여성계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계 전반이 광범위한 지지를 표명하며 결집한 것은 호주제 폐지 운동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의미는 여성운동이 ‘미투 관련’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 가면서 운동의 내적 역량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프레임을 전환해 변혁을 주도함으로써 외적 역량도 확장했다는 점이다. 실제 #미투 행동은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회 개최, 피해자 재판 지원, 영역을 넘나드는 이슈화와 성명서 발표, 언론 보도 및 정부와 국회의 법률과 제도 마련 안에 비판적이고도 실질적인 개입, 여론화와 대중적 결집을 위한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하였으며, 8월 18일까지 다섯 번의 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러한 집합적 행위는 기존의 정부 정책을 소리 높여 비판하고, 쟁점을 조직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연대하며 변화를 위한 공적인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여성시민의 존재를 인지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법과 제도 마련은 변화의 전제 조건일 뿐이다. 미세한 세포조직처럼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부정의 구조-우리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를 개혁하는데 나부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실천. 그것이 바로 #미투 행동이 던지는 메시지다.

혁명을 위해 진격하는 여성들

이제 여성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하려 하거나, 심지어 ‘몰타기’ 등 진영논리로 끌고 가려던 이들의 갖은 ‘불순한’ 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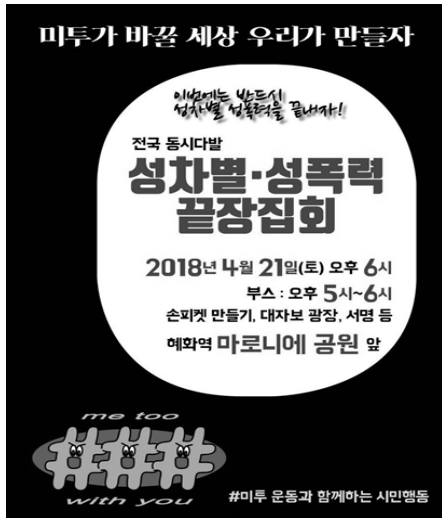
돌파하면서 생존자에서 증언자로 나서고 있다. 여성 문제가 아니라 남성문제라고 명명하며, 피해자의 자격을 묻던 이들에게 가해자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아픔을 해집고 직시하며 생을 걸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함으로써 기존의 선/악,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란 수사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직시하자고 외친다. 지금 당신이 불편하다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외친다. 여성은 아직도 인간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감히 ‘미투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성평등이 결핍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기에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며, 촛불혁명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일렁이는 핫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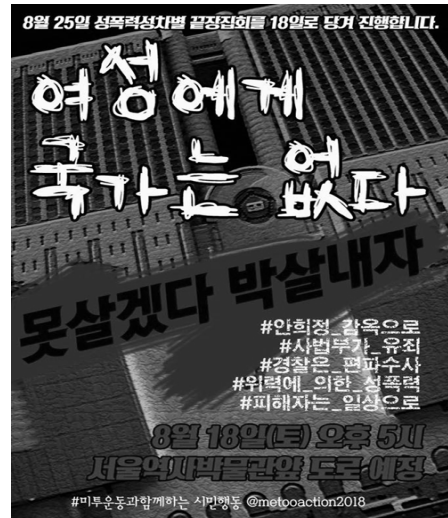
출처: 중앙일보, 2018년 3월 15일

[그림 3]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출처: 미투 행동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etooaction2018/>

[그림 4] #미투 행동 집회 공지 포스터



출처: 미투 행동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그림 5]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무죄 판결에
 저항하며 열린 집회(2018년 8월 18일)

심한 성별불균형(gender discrepancy) 속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는 ‘성평등의 신화’와 ‘역차별’의 착시현상에 분노하여 아래로부터 분연히 일어난 여성해방의 ‘시민 혁명’이다. 일상 속 성차별적 관계와 관습적 문화, 그 문화를 배태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자 하기에 한 세기 이상 진행된 대한민국 여성해방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해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두 명의 희생적 영웅이 이끌던 운동을 넘어 선배들의 유제를 잇되 넘어서고자 하는 이들이 각자 변혁의 책임을 진 주체로 상호 연루됨을 적극 요청하는 대규모 민중 봉기다.

이제 ‘남성’들의 시대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여성이 열등하고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라던, 그래서 ‘몸뚱이’에 불과한 도구적 존재라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은 끝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어서고 동맹하고 진격할 것이

다. 과거를 식민화하고 현재를 착취하고 미래마저 약탈하고 있는 팔루스 연대의 해체를 위해,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들이 조금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다. 봉건적 사고로 케케묵은 남성성의 옷을 벗지 못해 우리 사회 전반을 다시 퇴행시킬 장본인이 될 것인가, 보다 나은 민주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인가. 미투 혁명은 이제 시작이며, 결국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닮아 있을 것임을.